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100087-10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발간사

현재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과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혁신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발간하는 「2025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에는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문제인식부터 추진과정, 개선효과에 이르기까지 규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한 담당자들의 열정과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를 개선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했으며, 지속적인 주민 설득과 규제 완화를 통해 봉안시설을 확충하여 '장사대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에서 수상하였으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우수한 사례들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확산되어 또 다른 규제혁신 사례 발굴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시는 언제나 시민과 기업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실천하는 적극행정과 도전하는 규제혁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목 차 CONTENTS

Chapter 01 경제활력 제고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 개선 6
2 AI기반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부산올랭 구축 7
3 법률 개정 건의를 통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8
4 노후건축물 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9
5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10
6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로 투자기업의 보험료 부담 경감 11
7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녹지점용허가 관련 기업애로 신속해결 12
8 동부산권 산업단지 통근버스 노선 신설하여 기업애로 해소 13
9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잔재물 소각으로 매립공간 확보 및 비용 절감 14
10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한 빈집 중개 지원사업 추진 15
11 상권활성화사업 등 공모 선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반 마련 16
12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7
13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완화 18
14 조례 개정을 통한 맞춤형 지역특화보증지원 19

Chapter 02 시민불편 해소

15 주민소통과 민·관·학 협업으로 이룬 안전한 통학로 22
16 시유지 무상사용 권한 확보를 통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23
17 배움 넘어 일자리로, 민생경제 활성화까지! 24
18 제도개선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확대 추진 25
19 장기기증 예우와 지원 편의 도모를 위한 '기증확인증' 발급 규정 마련 26
20 동백패스 혜택, 모바일로 더 간편하게 27
21 수요응답형 교통(DRT) '타바라' 운행 확대 28
22 공공건물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숙원 해결 29
23 휠체어, 유모차도 안전하게 숲 속으로!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30
24 스마트 기술로 효율성 UP!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31
25 전국 최초, 사회복지사 대상 '힘내라 새내기 수당' 지급 32
26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여 자연재해 예방 33
27 부산시 최초, 치매전담형 구립 요양원 본격 건립 추진 34
28 예고없는 옹벽 붕괴, 이제는 시민안전 매뉴얼이 책임집니다 35
29 대중교통 최초,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개발 36
30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대폭 강화 37

Chapter 0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1 부산시 최초,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40
32 글로벌허브도시로의 가장 빠른 길, 엄궁대교 건설 추진 41
33 소방관 공동현관문 프리패스로 시민재산과 생명을 구한다 42
34 증여계약해제 안내 기능 생성으로 납세자 중심 패러다임 실현 43
35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최단기간 적격성조사 완료 및 통과 44
36 선상 출장심사를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45
37 주민 설득과 규제 완화로 장사대란 해결!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확충 46
38 경제자유구역 내 18년간 방치된 미개발부지 관련 기업애로 해소 47
39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통한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 성공 개최 48
40 부산우수식품, 협업으로 완성한 지역 로컬브랜드 혁신 49
41 365일 시민 곁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 통합·확대 운영 50
42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응급분만 안전망 구축 51
43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시행 52
44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를 활용한 장림유수지 유지용수 공급 53
45 '인명피난구조공간' 피난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운영 54
46 전국 최초! 위험물 정보지도 웹사이트 자체 개발 55
47 붕괴위험 공동주택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현 56
48 신기술·특허공법 선정평가 시, 지역업체 가점 적용 신설 57
49 적극행정을 통한 대심도 터널 지반침하 및 사업지연 요인 사전해소 58
50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체계 구축 59

Chapter 04 부 록

1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 바랍니다. 62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64

Chapter 01

경제활력 제고

Chapter 01 경제활력 제고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 개선
2 AI기반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부산올랭 구축
3 법률 개정 건의를 통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4 노후건축물 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5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6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로 투자기업의 보험료 부담 경감
7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녹지점용허가 관련 기업애로 신속해결
8 동부산권 산업단지 통근버스 노선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
9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잔재물 소각으로 매립공간 확보 및 비용 절감
10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한 빈집 중개 지원사업 추진
11 상권활성화사업 등 공모 선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반 마련
12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13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완화
14 조례 개정을 통한 맞춤형 지역특화보증지원

01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4922, 4924)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 개선

- 행안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행안부장관상)"
- 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개선배경

- 201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 추가 행정절차로 인한 이중규제 발생
-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 최소 6개월 및 추가 비용 소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 복잡한 행정절차로 입주기업 부담 가중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예외규정 신설 〉 • 지속적 설득·협의로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 행정절차 단축에 따른 입주기업 부담 해소

추진과정

-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 규제개선 건의사항 제출(2024.8.)
- 방문, 유선을 통해 규제개선 관련 협의 지속 추진(2024.8.~12.)
- 국토교통부와 산업단지 규제혁신과제 검토회의 개최(2025.1.)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완료(2025.3.)
  - 2014년 7월 이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지방정부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개선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로 입주기업 재정부담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산시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 16개 산단, 5,500여 개 입주기업에 혜택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단축(최소 6개월), 최대 1,000억 원 비용 절감
-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02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1-888-3392)

전국 최초! AI기반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부산올랭' 구축

- 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개선배경

- 외식업계는 비용부담 및 번역오류 우려로 다양한 언어의 메뉴판 도입에 소극적
- 메뉴와 가격 변동이 빈번하나, 기존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은 일회성 지원 위주
- 영업주와 외국인 모두 손쉽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기존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은 메뉴·가격 변동 시, 즉시 반영 어려움 • 메뉴판 제작 비용부담, 번역오류 우려	〈 AI기반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구축 〉 • 영업주가 손쉽게 메뉴판 제작·수정 가능 • 무료 제작, 전문 번역가 검수로 오역 최소화

추진과정

- 편의성 중심의 사용자 맞춤형 외국어메뉴판 지원계획 수립(2024.3.)
-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완료(2024.4.~6.)
- AI 기반 메뉴판 제작 플랫폼을 도입한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 본격 착수(2024.9.)
-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부산올랭' 사전테스트 및 설명회 개최(2025.3.)
- 전국 최초, AI 기반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전용 플랫폼 구축 완료(2025.6.)
  - (영업주) 메뉴판 사진을 플랫폼에 업로드 → 이미지 속 텍스트 자동 인식·번역 → 전문 번역가 2차 검수(오역 최소화)
  -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은 음식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원하는 언어로 외국어메뉴판 확인(7개 언어 지원)
- 글로벌 인플루언서 '다샤 타란' 홍보대사 위촉하여 세계적 파급력 기대 ▶ 위촉식영상 151만 뷰(2025.7.)

개선효과

- 영업주 경영 부담 해소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속 가능한 외식행정서비스 체계 마련
- 외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03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공원도시과(051-888-3944), 조직담당관(051-888-1176)

법률 개정 건의를 통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개선배경

-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근거 마련
- 지방정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 과도한 절차로 지정 사례 없음
  ▶ 사하구 을숙도 일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애로

개선내용

개선 전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과도함
  - 면적 300만㎡ 이상 / 국무회의 심의

개선 후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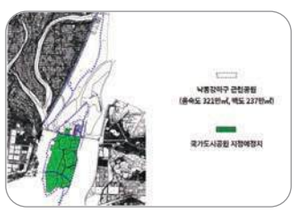
- 지속 건의를 통한 공원녹지법 개정
  - 면적 100만㎡ 이상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가속화

추진과정

- 2023년 2분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건의(2023.4.)
- 2025년 상반기 지방정부 규제개선 과제 건의(2025.3.)
- 행정안전부 주관 제2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2025.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5.8.) ※ 2026.8.27. 시행
  -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개정되어 면적규모 완화 및 심의절차 간소화

개선효과

- 완화된 지정요건으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가속화
- 낙동강 하구를 세계적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부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구축





언론보도(부산MBC, '24.11.28.)



언론보도(부산일보, '25.11.7.)

04

>>> 추진부서 부산진구 경제관광과·기획예산과(051-605-4035), 부산광역시 조직담당관(051-888-1176)

노후건축물 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개선배경

- 노후·불량건축물은 관련 지침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불가
-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한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용도의 숙소로 제공하려는 수요 많으나, 노후건축물 이용규제로 인해 등록 불가

개선내용

개선 전

-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불가

개선 후

〈 노후건축물 이용규제 완화 〉

- 건축물 안전성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개정 달성

추진과정

-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신문고를 통해 개선 건의(2025.2.)
- 2025년 상반기 지방정부 규제개선 건의(2025.3.)
-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침」 개정(2025.10.)
  -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가능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침」 현장심사 점검사항 제4호 개정 〉

기 존	개 선
4.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4.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

개선효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진입장벽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체부 대표 블로그('25.10.10.)



언론보도(뉴시스, '25.10.10.)



언론보도(KTV국민방송, '25.10.11.)

05

>>> 추진부서 서구 청소행정과(051-240-4436)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선배경

- 노후건물 등이 밀집하고 유휴 부지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기반시설 건립 어려움
  ※ 부산시 내 인구감소지역 ▶ 동구, 서구, 영도구
-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건립 규제 해소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시설 건립 시, 건폐율·용적률 제한	〈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 • 100분의 120 범위에서 기반시설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과정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로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건의(2023.2.)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결정(2024.7.)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완료 및 공포·시행(2025.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의2 신설 〉

기 존	개 선
〈 신설 〉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생략

개선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생활환경 인프라 확대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06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051-888-4454), 조직담당관(051-888-1176)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로 투자기업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개선배경

- 투자 MOU 기업은 보조금 수령 시, 사업이행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보조금 신청일부터 사업이행기간(5년)에 1년을 가산한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해야 함
- 보험가입기간이 길고 보조금 일부(약 10%)를 보험료로 집행하게 되어 보조금 지원의 실질적 규모 감소 및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단일증권'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 사업이행 전 기간 보장 단일증권 발급 • 보조금의 약 10%를 보험료로 지출	〈 보증보험증권 가입기준 완화 〉 •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 차감 가능 • 보증보험료 부담 경감(기존 대비 약 25%)

추진과정

-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2025.1.)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2025.3.4.)
- 투자유치과 규제개선 검토 및 수용 의견 회신(2025.3.11.)
- 2025년 제2회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안건 보고(2025.3.24.)
- 투자유치과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지침」 개정 및 시행(2025.4.~)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지침」 제9호 개정 〉

기 존	개 선
제9조(투자보조금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22조 제4항의 보증서는 전체 채권액이 확보되도록 징구해야 하며 발급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기간이 보장되는 단일 증권으로 발급 (연차별 차감 불가)** (이하 생략)	제9조(투자보조금 교부 및 지급) ① 좌동 1.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시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BB-'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개선효과

- 보증보험료 경감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

07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1-888-2602)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녹지점용 허가 관련 기업애로 신속 해결!

개선배경

- 관내 기업이 공장 증축공사 추진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사업장 서편 완충녹지에 공사차량 전용 임시 도로를 개설하고자 녹지점용허가를 신청
- 허가기관과의 법령해석 차이로 녹지점용허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사업시설 증설을 추진 중인 기업활동에 애로사항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기업이 공사차량 전용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녹지점용허가 신청하였으나, 허가기관과의 법령해석 차이로 허가 불투명	〈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기업애로 해결 〉 • 관계기관 협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등을 통한 녹지점용허가로 기업 손실 예방

추진과정

- 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접수(2024.11.4.)
-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녹지점용허가 가능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2024.11.~12.)
  - 강서구,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방안 모색 →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 결정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2025.1.7.)
- 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완료(2025.1.17.) ▶ 녹지점용허가 적극검토 필요 결론
- 녹지점용허가 알림(2025.1.23.)

개선효과

-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신속한 규제애로 해소로 막대한 기업 손실 예방
- 투자 걸림돌 해소에 따른 기업과의 투자 MOU 체결(2025.2.26.) ▶ 투자 1,008억 원, 고용 330명
- 규제혁신을 통한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08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조직담당관(051-888-7695, 2594, 1176)

동부산권 산업단지 통근버스 노선 신설하여 기업애로 해소

개선배경

- 동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정관읍 등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근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 부족 ▶ 출·퇴근 불편, 교통체증 등 기업 애로사항 지속 제기
-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대응 방안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동부산권 산단 근로자 상당수 거주하는 정관읍과 산업단지 연결 대중교통 부족	〈 동부산권 산단 통근버스 노선 신설 운영 〉 • 정관신도시~장안·반룡산단 직행 노선 신설 • 모바일앱 개발로 통근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추진과정

- 부산경제진흥원과 기시행 중인 통근버스 확대 운영 협의(2025.3~5.) ▶ 부산시 경제정책과
- 기장군 산단조합·협의회 및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기업애로 접수(2025.5.)
- 정관신도시~장안산단~반룡산단을 잇는 동부산권 통근버스 노선 신설 운영(2025.7.~)
- 산업단지 근무자 맞춤형 통근버스 앱 '산단타요' 개발 및 출시(2025.5.~10.)
- 통근버스 앱 시범운영(2025.10.) 및 본격 제공(2025.11.~)

개선효과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민중심의 통근여건 개선
- 출·퇴근 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09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051-888-3712)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잔재물 소각으로 매립공간 확보 및 비용 절감

개선배경

-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잔재물(불연성·유기성물질 등)은 연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환경문제로 인해 소각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처리 ▶ 매립공간 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잔재물 전량 매립 • 2024년 잔재물 발생량 ▶ 총 47,662톤	〈 잔재물 일부 소각하여 매립비용 절감 〉 •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잔재물 일부 소각 • 매립공간 효율화 및 경제적 이익 창출

추진과정

-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잔재물 소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2024.5.24.)
- 부산시-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해운대주민지원협의체 잔재물 소각 협의(2024.6.28.)
  → 시험소각 동의(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 시험소각 실시로 배출가스 분석을 통한 소각 안전성 데이터 확보(2024.8.16.)
- 잔재물 소각 지속 처리 중(2024. 8.~) ▶ 136.8톤/월

※ 잔재물 소각 전·후 배출가스 분석

구분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염화수소 (HCl)	일산화탄소 (CO)	먼지 (Dust)
허가기준			42.5	16	12	45	12
목표기준			20이하	8이하	5이하	10이하	6이하
해운대 자원 에너지 센터	잔재물 소각 전(2024.7.)		13.76	0.12	0.12	1.20	0.83
	잔재물 소각 후	2024.9.	11.30	1.00	0.11	5.10	0.95
		2024.10.	11.85	0.54	0.06	5.54	1.14
		2024.11.	15.01	0.25	0.04	2.79	1.09
		2024.12.	15.30	0.64	0.04	4.74	0.73

개선효과

- 전량 매립되던 잔재물 일부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매립 공간의 효율성 증가
-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의 재활용 및 매립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 ▶ 4.7백만 원/월





10

>>> 추진부서 중구 재생건축과(051-600-4622)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한 빈집 중개 지원사업 추진

개선배경

- 생활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주거·상권 활력이 약화되면서 빈집 발생 증가
- 기존 빈집 정비는 도시경관 및 주민안전을 위해 철거·수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 회복과 상권 재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빈집 정비·활용방안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기존의 빈집 정비는 철거, 수리 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 정책 추진	〈 빈집 중개 지원사업 '빈집뱅크' 추진 〉 • 민·관 협력을 통해 빈집 중개를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정책 추진

추진과정

-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빈집 중개 지원근거 마련(2024.6.)
-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2024.11.) ▶ 중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 중구청 누리집 내 빈집뱅크 온라인 플랫폼 구축(2024.12.)
- 전국 최초, 빈집 중개 지원정책 '빈집뱅크' 본격 추진(2025.1.~)
  - (내용) 협력공인중개사가 빈집 의심 매물을 빈집뱅크에 등록 요청 → 중구에서 빈집 여부 확인 및 등록 완료
    → 협력공인중개사가 빈집 중개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중구에서 요건 확인 및 빈집 중개수당 지급
  - (실적) 2025년 빈집중개실적 35건

개선효과

- 민간과 협력하여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동시 해결
- 전국 최초, 선도적인 빈집 중개 지원정책 추진으로 중앙부처 및 타 지방정부 확산 효과







11

>>> 추진부서 금정구 경제산업과(051-519-4475)

상권활성화사업 등 공모 선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반 마련

개선배경

- 경기침체 장기화 및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대표 상권인 부산대학교 일원 등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상권 활력 저하 및 슬럼화 진행 우려
- 관내 전통시장도 시설 노후화,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소비자 방문 감소 등에 따른 폐업률 증가로 지역상권 불안정 가속화

개선내용

개선 전

- 지역 상권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 및 경쟁력 저하

개선 후

〈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반 마련 〉

-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공모사업 선정
-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추진과정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및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2024.12.)
- 부산대 자율상권구역 지정(2024.12.)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원 혜택
- 금정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2025.2.)
- 부산시 및 중앙부처 주관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확보 ▶ 총 80억 원
  -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선정 및 2025년 지역상권 활력 지원사업 선정

개선효과

-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상권 회복의 물리적 기반 마련
- 민·관 협업을 통한 모범적인 상권 회복 모델 제시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및 화재공제 가입률 향상 등으로 소상공인 안전망 확보에 기여





언론보도(KBS뉴스, '25.1.17.)


"위기의 상권 살리자" 부산대 등 3곳에 160억 지원
언론보도(동아일보, '25.5.1.)

12

>>> 추진부서 강서구 경제진흥과(051-970-4252)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배경

-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은 3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한정적이나,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입주업종 확대 가능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주업종 확대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3종으로 제한적
- 입주 제한으로 인한 공실 발생

개선 후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

- 15종을 추가하여 다양한 기업 입주 가능
-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과정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관련 타 지방정부 사례 등 사전 조사(2025.3.)
- 관련 기관(부서)과 입주업종 확대 사전 협의 및 의견 청취(2025.4.)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및 고시(2025.6.27.~) ▶ 15종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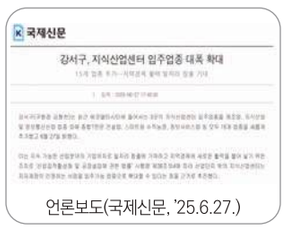
기 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15종 추가)	
•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 OEM 제조업(1) • 종합전문 건설업(1) • 스마트팜 수직농장(1) • 법무 관련 서비스업(4)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2)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 • 정보서비스업(1) • 도로화물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3)

개선효과

-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제조·서비스·IT 등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한 산업 간 상생효과 극대화



언론보도(부산일보, '25.6.30.)



언론보도(국제신문, '25.6.27.)



언론보도(Btv news, '25.6.30.)

13

>>> 추진부서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051-709-4714)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완화

개선배경

-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례지역'으로 분류되어 입주기업의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과도하게 엄격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도 기업은 자체 폐수처리장을 신설·운영하여 폐수를 배출해야 함에 따라 건설비, 운영비 부담 가중 및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

개선내용

개선 전

- 특례지역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되어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

개선 후

〈 별도배출허용기준 마련 〉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및 용역 추진
- 폐수 배출허용기준 완화 및 규제 현실화

추진과정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및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용역' 추진(2023.9.~2024.10.)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
-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및 고시 완료(2024.10.16.)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132호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적합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배출허용기준' 비교 〉

항 목	기 존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개 선 (별도배출허용기준)
BOD(mg/L)	30	350
TOC(mg/L)	25	160
SS(mg/L)	30	145
T-N(mg/L)	60	60
T-p(mg/L)	8	8

개선효과

- 기업의 자체 폐수처리시설 건설비 최대 150억 원, 연간 운영비 최대 36억 원 절감 효과
- 규제 현실화로 기존 입주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신규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14

>>> 추진부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운영부(051-860-6634)

조례 개정을 통한 맞춤형 지역특화보증지원

개선배경

- 구·군별 소상공인 정책수요가 상이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부산시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으로는 구·군 맞춤형 정책지원 불가, 구·군의 출연 및 사업 추진 근거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구·군 출연 근거 모호
- 소상공인에 대한 획일적 보증지원

개선 후

〈 조례 개정하여 구·군 출연 근거 마련 〉

- 구·군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보증 지원

추진과정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2024.7.)
-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발의(2024.8.16.) 및 개정 시행(2024.9.25.)
- 16개 구·군 방문 홍보, 구·군별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 참가(2025.1.~)
- 부산시 지역상권 빅데이터 분석 용역 체결, 지역별 특성 및 보증효과 분석 실시(2025.2.7.)
- 해운대구와 지역특화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2025.6.18)
- 부산시 최초, 지역특화보증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시(2025.7.1.)

〈 「부산신용보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 〉

기 존	개 선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하 생략)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및 **구·군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하 생략)

개선효과

- 조례 개정을 통한 구·군별 산업구조, 상권·인구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 실시로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구·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정책지원 협력모델 구축

Chapter
02

시민불편 해소

15 주민소통과 민·관·학 협업으로 이룬 안전한 통학로
16 시유지 무상사용 권한 확보를 통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17 배움 넘어 일자리로, 민생경제 활성화까지!
18 제도개선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확대 추진
19 장기기증 예우와 지원 편의 도모를 위한 '기증확인증' 발급 규정 마련
20 동백패스 혜택, 모바일로 더 간편하게
21 수요응답형 교통(DRT) '타바라' 운행 확대
22 공공건물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숙원 해결
23 휠체어, 유모차도 안전하게 숲 속으로!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24 스마트 기술로 효율성 UP!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25 전국 최초, 사회복지사 대상 '힘내라 새내기 수당' 지급
26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여 자연재해 예방
27 부산시 최초, 치매전담형 구립 요양원 본격 건립 추진
28 예고없는 옹벽 붕괴, 이제는 시민안전 매뉴얼이 책임집니다
29 대중교통 최초,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개발
30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대폭 강화

15

>>> 추진부서 영도구 교통과(051-419-4558)

주민소통과 민·관·학 협업으로 이룬 안전한 통학로

• 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개선배경

- 청동초등학교 학생 80%의 주 통학로 구간에 위험 옹벽이 이어져 있으나 안전시설 부재
- 해당 통학로는 사유지 내 도로구간으로, 인근 주민의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 시, 주민 조망권 침해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개선내용

개선 전

- 청동초 학생의 주 통학로에 2m 이상 옹벽이 100m 넘게 이어져 상시 위험

개선 후

〈 안전한 통학로 조성 〉

- 주민소통과 민·관·학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확보

추진과정

- 민·관·경·학 합동 현장점검 및 청동초 통학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2023.4.)
  - 영도구청, 부산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영도경찰서, 시·구의원 등 합동점검
- 부산시교육청의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시비 2억 원) 결정(2023.11.)
- 1~4차 주민설명회 및 용역보고회 개최(2024.2.~8.) 및 주민동의서 징구(2024.9.)
- 공사기간 중 주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자동차운전학원 주차장 무상사용 협약 체결(2024.9.)
- 공사 시행 및 완료(2024.10.~2025.2.)

개선효과

- 관내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을 적극 확보
- 끈질긴 설득을 통한 주민 협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민·관·학 협업 성과 달성



개선 전



개선 후



국제신문

'20년 안에 꿈터리 짓는 청동초 통학로…민관협력 빛났다

언론보도(국제신문, '24.12.3.)

16

>>> 추진부서 동래구 체육홍보과(051-550-4482)

시유지 무상사용 권한 확보를 통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추진

• 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개선배경

-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참여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 요구 지속 제기
- 높은 인구밀도와 토지매입 비용, 시유지 활용 어려움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제약으로 제2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음

개선내용

개선 전

- 시유지 활용 어려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례 부재로 체육센터 부지 선정 난항

개선 후

〈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확보 〉

- 합의를 통한 시유지 무상사용 권한 확보
-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과정

- 주민협의체 회의 등 수민어울공원(시유지) 내 체육센터 건립 의견 수렴(2023.2.~4.)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변경 신청(2023.9.) 및 결정(2024.4.)
- 도시관리계획(수민어울공원 조성계획) 변경 신청(2024.4.)
- 부산시와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 및 부산시의회 동의(2024.4.)
- 부산시 신규사업사전심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승인(2024.5.)
- 도시관리계획(수민어울공원 조성계획) 변경(2024.8.) ※ 제2국민체육센터 반영
- 부산시 정책과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확보, 사업추진 행정절차 진행 중

개선효과

-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권한 확보로 부지매입비 등 사업예산 대폭 절감
-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BUSAN.com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언론보도(부산일보, '25.4.9.)

17

>>> 추진부서 연제구 일자리경제과(051-665-4545)

배움 넘어 일자리로, 민생경제 활성화까지!

• 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개선배경

- 느린 학습자(경계성 지능인)는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 근거 미비
- 대인관계, 감정조절 문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제한적인 느린 학습자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느린 학습자 지원 제도적 근거 미비
-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개선 후

〈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조례 개정을 통해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지원 기반 구축

추진과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2024.9.25.)
  - 느린학습자 대상 '지원사업' 조항 신설하여 교육훈련과 취업 연계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지원 근거 명문화
- 느린 학습자 학습지원 및 직업체험 교육, 부모 교육 병행 추진(2024.9.~)
- 부산시 주관 2025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2025.2.)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2025.4.)
-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2025.5.), 수료생 취업 연계(2025.7.~)

개선효과

- 제도적 지원 공백을 보완하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회 제공
- 관내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성화 기여







18

>>> 추진부서 수영구 복지정책과(051-610-4343)

제도개선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확대 추진

• 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개선배경

-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은 교육비로 한정되어 있어 학습공간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범위 제한적

개선내용

개선 전

-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비만 지원 가능
- 기초수급 초등학생만 예능교습비 신청

개선 후

〈 조례 개정 등으로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 교육비 외 학습공간 등 교육지원 다양화
- 예능교습비 신청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과정

-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 대상 다양한 교육지원 근거 마련
  -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2024.10.4.~2025.2.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 개정 및 시행(2025.3.10.)
    - ▶ 초·중·고등학생 등의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교육비, 학습공간 등 다양한 지원 가능
-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2024.10.4.~2025.1.8.)
  -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시행(2025.2.~)
    -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초등학생으로 확대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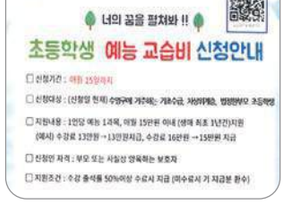
-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다양화 및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 예능교습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예능교육 활성화



언론보도(부산일보, '25.7.3.)



언론보도(국제신문, '25.2.20.)



19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1-888-3419)

장기기증 예우·지원을 위한 '기증확인증' 발급 규정 마련

개선배경

- 장기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권고로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추세 ※ 2021.3. 권익위 권고
- 기증확인증 발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기증확인증에 갈음한 공문을 발행하고 있어 기증자가 확인증을 소지·보관·제시하는 데 불편 초래
- 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기증확인증 발급 관련 세부규정 부재 • 예우 및 지원대상 관리체계 부재	〈 기증확인증 발급 규정 마련 〉 • 신용카드 크기로 발급 ⇒ 휴대, 제시 용이 • 대장관리 등 대상자 지원·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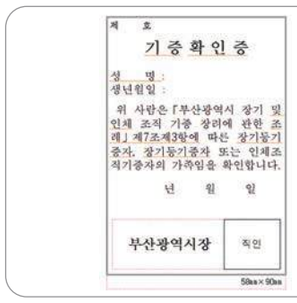
추진과정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기증확인증 발급 절차 문의(2025.4.21.)
- 전국 조례 현황조사 등을 통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작성(2025.5.)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2025.6.16.)
- 시행규칙 제정 절차 추진(2025.6.~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및 시행(2025.8.)

개선효과

- 기증자 예우·지원을 위한 기증확인증 소지·제시·보관의 편의 제공
-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기여





20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051-888-3906)

동백패스 혜택, 모바일로 더 간편하게!

개선배경

- 동백패스는 부산의 대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72만 명 이용 중(2025.6.기준)

  ❖ 동백패스란? 동백전 교통카드(후불, 선불)로 부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한 그 다음달에 동백전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 ▶ 전국 최초, 도입 및 시행 중(2023.8.1.~)

- 동백패스는 실물 카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동백패스는 실물 카드로만 이용 가능	〈 모바일 동백패스 시행 〉 • 더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동백패스 이용 가능 ※ 시행 첫날 9,725명 모바일 가입 등 시민 호응도 높음

추진과정

- 동백전 운영사 이해관계 적극 조율 및 협의 체계 구축 등 신속 추진(2025.2.~6.)
- 자문회의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민단체 공감대 형성(2025.2.25.)
- 모바일 동백패스 시행 협조 요청 및 오픈 전 이용자 테스트 실시(2025.5.~6.)
- 모바일 동백패스 시행(2025.7.1.)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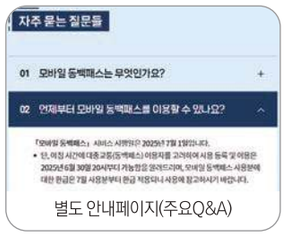
-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기존 대중교통 환급 혜택 그대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
- 이용 편의 개선으로 시민체감도 향상, 환급금의 동백전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제도개선에 따른 대외 수상, 다수 언론 보도 등 부산시 교통정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홍보영상(부산 영상 아카이브)



오프라인 홍보(관공서 게시판)



별도 안내페이지(주요Q&A)

21

>>>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051-888-3986)

수요응답형 교통(DRT) '타바라' 운행 확대

개선배경

- 대중교통 준공영제로 인한 막대한 운송비용 투입 및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운송원가 저렴하고 탄력적 운영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본격 도입 검토
- 도시 외곽지역 대중교통 이용 감소 및 배차간격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객 이탈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바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수요 증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운행구역 및 대수 등 한정적 – 관광지 5대 운행 (기장권역, 오시리아관광단지) • 도시 외곽 대중교통 감소 및 불편 증가	〈 타바라 운영 확대 시행 〉 • 운행구역 및 대수 확대 – 해운대구(송정), 강서구 확대 운영 ▶ 총 18대 • 도시 외곽으로 운행 확대 – 관광형, 기업형(출퇴근), 거주형(생활형)

추진과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종료 후 부산시 자체사업으로 전환 및 사업연장·확대(2024.9.~)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2024.12.)
- 부산시 교통위원회 심의·의결(2025.2.) ▶ 타바라 확대 시행 관련 사업자 선정 및 운행 계통 확정
- 강서권역 타바라 운송사업자 모집 및 선정(2025.3.~4.), 한정면허 발급(2025.6.)
- 타바라 확대 운영 개시(2025.7.5.~)

개선효과

- 대중교통 부족·소외지역의 시민 교통이용 편의 상승, 산단·공단지역 거주자 출퇴근 시 승용차 이용 감소 → 교통정체 해소, 탄소 저감 효과
- 타바라 확대 시행에 따른 강서·기장·송정지역 이용객 대기시간 감소로 이동 편의 제고





22

>>> 추진부서 동구 일자리경제과(051-440-4522)

공공건물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숙원 해결

개선배경

- 부산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 신청자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선납하면 준공 시점에 구에서 지원금을 지급
- 안창마을은 마을 진입로가 길어 도시가스 공급 시 긴 배관길이, 공폐가 등으로 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담 증가 및 주민 비용부담 가중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안창마을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도시가스 설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증가	〈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공급 〉 • 공사구간 분리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에 우선공급 • 구청의 비용 선납으로 주민부담 경감

추진과정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도시가스 공급공사 주민협의체 구성(2024.1.~2.)
-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24.7.)
  – 안창마을 내 공공건물(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활용하여 공사구간 분리
  –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구간에 구청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선납(8,200만 원)
- 안창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공사 착공식 개최(2024.12.)
-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도시가스 공급(2025.3.)
- 안창로 인근 주택용, 영업용 등 11개소(17세대) 도시가스 공급(2025.5.)

개선효과

- 공사구간 분리하여 취약계층 밀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 및 에너지복지 실현
- 동구 소유 건물 활용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선납 방식으로 주민 부담 경감




BUSAN.com
'40년 넘은 숙원 해결'… 부산 동구 안창마을, 도시가스 공사 착공식
언론보도(부산일보, '24.12.10.)

23

>>> 추진부서 남구 행정지원과(051-607-4122)

휠체어, 유모차도 안전하게 숲 속으로!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개선배경

- 이기대 공원은 해안 절경과 지질유산을 보유한 명소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나, 해안 절벽과 경사가 많아 보행약자의 접근·이용에 제약이 있음
- 공원 진입부터 주요 탐방로까지 휠체어, 유모차, 지팡이 사용자 등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이 많아 보행약자의 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경사가 많은 이기대공원의 지형적 특성상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 이용 제약	〈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 • 경사도를 완만하게 설계하여 보행약자 전용 탐방로 조성

추진과정

-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완료(2025.4.)
  - 지질 공원안내소부터 황칠나무길까지 데크 난간길, 휴게쉼터 등으로 조성된 480m 구간의 보행약자길 신설
  - 경사도를 8% 이하로 완만하게 설계하는 등 휠체어, 유모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전동휠체어 충전기, 데크 및 안내판 조명, 비상벨, CCTV 등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 지역 주민들과 사업구간 모니터링 점검 실시(2025.5.)
  - 지체장애인, 보행권 지킴이단, 갈맷길 가디언스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회원 등 100여 명 참여
-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기념 '숲속 동행 음악회' 개최

개선효과

- 이기대공원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보행약자의 이동권과 공원 접근성 향상
- 보행약자 친화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4

>>> 추진부서 북구 교통행정과(051-309-4502)

스마트 기술로 효율성 UP!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개선배경

- 북구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고, 특히 인근 상업지역 및 화명중앙공원 주변은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다수 발생
- 기존 노상 공영주차장은 주차할인 규정 미준수 및 요금 과다 징수 등 민원 지속 제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기존 노상 공영주차장은 주차할인 규정 미준수 및 요금과다 징수 등으로 민원 발생	〈 바닥제어 무인정산 주차시스템 도입 〉 • 시범운영으로 실효성 입증 및 확대 운영 • 요금정산 자동화로 민원 감소 및 편의 향상

추진과정

- 바닥제어장치를 활용한 무인정산 주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2023.9.21.~2024.3.20.)
  - 특허 보유업체와 협약, '화명중앙공원 주변 노상공영주차장(23면)'에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차량진입 시, 바닥에서 제어장치가 올라와 입·출차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무인정산기계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면 제어장치가 내려가 출차 가능
- 공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정산 주차시스템 확대 운영(2024.6.~)
  - 공영주차장 2개소 운영 ▶ 화명중앙공원 주변 노상공영주차장(23면), 대동화명대교 하부 공영주차장(39면)
  -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 및 요금결제, 할인등록 가능한 앱 구축 운영(2025.9.~)

개선효과

- 부산시 최초, 선진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요금 정산 자동화로 민원 대폭 감소
-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및 북구 세입 증대 기여



설치모습(화명중앙공원)



설치모습(대동화명대교)



언론보도(연합뉴스, '23.11.10.)

25

>>> 추진부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051-749-6225)

전국 최초, 사회복지사 대상 '힘내라 새내기 수당' 지급

개선배경

- 관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5년 미만 근로자가 다수이며,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 문제 발생
-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장기근속 유도방안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관내 사회복지사 중 5년 미만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낮은 급여로 잦은 이직 발생	〈 힘내라 새내기 수당 등 지원 확대 〉 • 저연차 사회복지사 대상 수당 지급 • 사회복지포인트 확대 지급

추진과정

-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2024.12.)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2025.1.)
- 전국 최초, 새내기 사회복지사 지원수당 신설
  -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사 1년 미만 사회복지사 대상 연1회 '새내기 지원수당(5만원)' 지급(2025.7.~)
- 부산시 최초, 사회복지포인트 확대 지급 ▶ 2024년 5만 원 지급 → 2025년 7만 원으로 확대 지급

개선효과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수당 지급을 통해 사회복지사 근로의욕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
- 사회복지사 직무 지속성을 높여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언론보도(부산일보, '25.1.8.)



언론보도(복지TV부울경방송, '25.1.9.)



언론보도(뉴스로, '25.7.9.)

26

>>> 추진부서 사하구 토지정보과(051-220-4750)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여 자연재해 예방

개선배경

- 사하구 소재 아파트 준공 후 잔여부지 지목변경(농지 → 임야) 불가로 인한 진정민원 발생
  - 해당 부지는 주택사업조합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한 부지 중 일부로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음
  - 농지법에 따라 2021년 사용검사 이후에도 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불가능
  - 개인(조합장) 명의로 부지 소유 → 입주자대표 변경 시 명의 이전 및 세금 납부 관련 문제 등 지속 발생
- 해당 부지는 아파트 옹벽 상단부에 위치한 고지대 경사지로,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 산사태 등 위험이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아파트 준공 후 잔여부지 지목변경 불가로 진정민원 발생 ▶ 농지 → 임야로 변경 불가	〈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목변경 완료 〉 • 부서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 산책로 조성하여 자연재해 예방

추진과정

- 진정민원(700명) 접수 및 현장 방문(2024.9.) ▶ 5개 부서 합동 현장방문 실시
- 구청장 면담, 관련 부서 민원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2024.9.)
- 농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농지를 임야로 전환 조건부 허가(2024.10.)
- 지목변경 및 산림조성 완료(2024.11.)

개선효과

-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부서 협력을 통한 해결책 제시로 답보상태 집단 민원 해소
- 집중호우 시 재해 우려가 큰 부지에 산림을 조성하여 선제적인 재해예방 조치
- 농지전용, 지목변경을 통한 국가 세외수입 및 사하구 세입 증가
  - 총 1,320만 원 ▶ 농지보전부담금 1,080만 원(국가 세외수입), 취득세 240만 원(사하구 세입)







27

>>> 추진부서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322)

부산시 최초, 치매전담형 구립 요양원 본격 건립 추진

개선배경

- 노령인구의 증가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질 높은 공적 서비스 제공 필요
- 부산시 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공급 부족 ▶ 노인요양시설 98개소 중 국공립 시설 1개소(시립)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치매 환자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 증가 • 부산시 권역 국공립 시설 부족	〈 치매전담형 구립 요양원 건립 추진 〉 • 공공 주도의 치매 돌봄체계 실현

추진과정

- 민간요양시설 시설장 간담회 추진 및 공공 인프라 구축 필요성 협의(2023.5.)
-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완료(2023.5.)
- 공공건축심의회 심의(2024.9.), 건립부지 매입(2025.1.)
- 설계공모(2025.2.~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025.5.~11.) ▶ 2025.12. 착공, 2026.12. 완공
  - (위치) 사상구 모라동 592번지 일원 / (사업비) 77억 원
  - (면적) 1,360㎡ ▶ 약 412평 / (규모) 지상2층 ▶ 프로그램실, 침실, 물리치료실 등

개선효과

- 공공 주도로 치매전담형 구립 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 서비스 및 체계적인 관리 제공
-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 및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



언론보도(KBS, '25.2.3.)



28

>>> 추진부서 부산도시공사 공항도시기획부(051-810-9931)

예고없는 옹벽 붕괴, 이제는 시민안전 매뉴얼이 책임집니다

- 범정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행안부장관상)"

개선배경

-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로 옹벽 붕괴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별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지침」의 체크리스트는 점검내용이 광범위하고 점검기준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최근 기후변화로 옹벽 등 안전점검 강화 • 현장에서 활용하는 안점점검 기준 내용이 광범위하고 정량화되어 있지 않음	〈 협업T/F팀 구성하여 자체 매뉴얼 마련 〉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현장경험을 반영한 옹벽점검 매뉴얼 제작

추진과정

- 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부산도시공사 업무협약(MOU) 체결(2025.4.)
- 대한토목학회의 보강토옹벽 매뉴얼 사용방법 안내 및 지반공학 강연(2025.5.13.)
- 테스트베드 보강토옹벽 현장(7개소) T/F팀 합동점검 실시(2025.5.~7.)
- 보강토옹벽 매뉴얼 고도화를 위한 T/F팀 워크숍 추진(2025.7.3.)
- 대한토목학회지 게재 및 '현장 실무자를 위한 보강토옹벽 보호 매뉴얼' 제작(2025.8)
  - 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 부산도시공사, 대한토목학회가 협업T/F팀 구축하여 제작
  - 대한토목학회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현장경험을 반영한 매뉴얼 제작
  - 기존의 정성적 점검방식이 아닌, 15개 항목에 정량적인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등 표준화된 점검기준 마련

개선효과

- 현장 중심 원스톱 통합 지침서를 마련하여 실무자들의 현장대응력 강화
- 선제적인 재난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







29

>>> 추진부서 부산교통공사 여객사업처(051-640-7023)

대중교통 최초,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개발

개선배경

- 승차권 발매기를 통해 승차권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지참하여 고객이 직접 역무안전실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 불편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고객이 ①승차권 구매 후 ②영수증 지참하여 ③역무안전실 방문, ④직원의 현금영수증 수동 등록을 거쳐 ⑤국세청 반영 (5단계)

개선 후

〈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개발 〉

- 고객이 ①승차권 구매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핸드폰 번호 입력, ②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세청 자동 등록 (2단계)

추진과정

- 도시철도 결제 환경에 적합한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및 계약(2024.2.)
-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2024.2.~5.)
- 승차권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전면 시행(2024.6.)

개선효과

- 대중교통 최초로 승차권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년 대비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 약 1,200배 증가 및 5.6억 원 수준 소득공제 혜택 선제 제공
  ※ 2023년 현금영수증 200건 미만 발급 → 2024년 현금영수증 253,821건 발급
- 기존 현금영수증 수동 발급 방식에서 탈피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역 운영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등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30

>>> 추진부서 부산시설공단 이동지원처(051-850-4613)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대폭 강화

개선배경

- 장애인·임산부 콜택시는 택시기사가 배차 콜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특성상 자주 방문하는 지역(병원, 복지센터, 거주지 등) 외에는 상대적으로 배차지연·취소 등 빈번
- 차량배차의 유연성 강화 및 콜 수락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개별' 운영
  – 택시사별 개별 배차·운행 프로그램 사용
  ※ 자비콜(장애인) 750대
  등대콜(임산부) 2,100대

개선 후

〈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 〉

- 중계서버를 활용한 통합 배차시스템 일원화
- 통합배차로 우선수락 차량 배차

추진과정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 기본방침 수립(2024.11.)
-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개선 완료(2024.12.)
- 통합 중계서버 개발 진행, 오류 해소방안 등 검토(2025.1.~2.) ▶ 부산시 택시운수과, 공단, 콜택시
- 업무협약 체결(공단↔콜택시), 서버 전환 및 모니터링 등 통합운영 실시(2025.3.~4.)

개선효과

- 콜택시 배차지연 개선 및 편의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 (장애인) 전년도 대비 3개월 일평균 배차율 8%p 향상 ▶ 79%→87%
  – (임산부) 전년도 대비 3개월 일평균 배차율 44%p 향상 ▶ 36%→80%
- 적극적인 특별교통수단 CS 강화를 통해 도시복지 수준 제고 및 시민 만족도 증대







Chapter
0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Chapter 0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1 부산시 최초,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32 글로벌허브도시로의 가장 빠른 길, 엄궁대교 건설 추진
33 소방관 공동현관문 프리패스로 시민재산과 생명을 구한다
34 증여계약해제 안내 기능 생성으로 납세자 중심 패러다임 실현
35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최단기간 적격성조사 완료 및 통과
36 선상 출장심사를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37 주민 설득과 규제 완화로 장사대란 해결!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확충
38 경제자유구역 내 18년간 방치된 미개발부지 관련 기업애로 해소
39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통한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 성공 개최
40 부산우수식품, 협업으로 완성한 지역 로컬브랜드 혁신
41 365일 시민 곁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 통합·확대 운영
42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응급분만 안전망 구축
43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시행
44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를 활용한 장림유수지 유지용수 공급
45 '인명피난구조공간' 피난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운영
46 전국 최초! 위험물 정보지도 웹사이트 자체 개발
47 붕괴위험 공동주택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현
48 신기술·특허공법 선정평가 시, 지역업체 가점 적용 신설
49 적극행정을 통한 대심도 터널 지반침하 및 사업지연 요인 사전해소
50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체계 구축

31

>>> 추진담당자 건강정책과 강영숙 주무관

부산시 최초,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개선배경

- 부산시 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부재
- 민간아동병원의 24시간 운영 어려움으로 인한 응급기능 부재, 수익성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 제공 부족
- 아동 성장 시기에 맞는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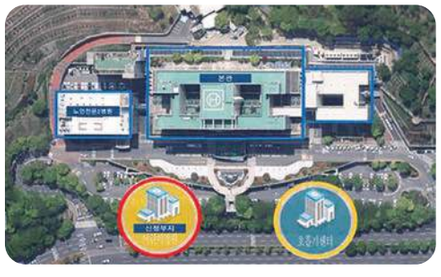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 부산 내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기관 부재	〈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 • 국비 확보로 부산시 최초, 지역거점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 마련

추진과정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023.8.~2024.5.)
- 어린이병원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2023.11.~)
-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2024.6.) ▶ (위치) 연제구 거제동 1518(부산의료원 내 부지)
-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선정평가 등 대응 및 국비 225억 원 확보(2024.10.)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조건부 통과(2024.11.)
- 건축공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실시(2024.12.) ▶ (협약) 건설본부 ↔ 부산의료원
- 설계공모 및 설계자 선정(2025.8.),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추진(2025.9.~2026.7.)
  ※ 2026년 하반기 착공 → 2027년 12월 준공(2028년 개원 예정)

개선효과

-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 및 장애아동 맞춤 통합재활치료 제공으로 아동의료 체계 구축
- 아동의료 전달체계의 거점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





32

>>> 추진담당자 도로계획과 이창봉 주무관

글로벌허브도시로의 가장 빠른 길, 엄궁대교 건설 추진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개선배경

- 엄궁대교는 에코델타시티의 주 진입도로로서 개설이 시급하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현상변경 허가 필요
- 엄궁대교 건설 예정지는 조류생태 가치가 높아 환경단체 반대 및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로 사업추진 장기간 중단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환경단체 반대 및 환경영형평가 협의 반려로 사업추진 중단	〈 엄궁대교 건설사업 본격 착공 〉 • 주민·환경단체·전문가 협의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건설 방안 마련 및 행정절차 완료

추진과정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철새 관련 보완조사 등 추진(2022.1.~2023.11.)
- 전문가 토론회(2022.11.) 및 주민설명회 개최(2023.12./2024.2.)
-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접수 및 보완 협의 완료(2024.3.~9.)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현상변경 소위원회 현장점검 및 심의 완료(2024.5.~10.)
- 설계VE, 제영향평가, 기술심의 완료(2024.11.), 건설공사 계약(2024.12.)
- 하천(낙동강) 점용허가 완료 및 공사 착공(2025.6.) ※ 2030년 완공 예정

개선효과

-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체증 문제 해소 및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의 교량 건설 추진
- 에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시설로서 지역 균형발전 기대





33

>>> 추진담당자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천영선 소방위

소방관 공동현관문 프리패스로 시민재산과 생명을 구한다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개선배경

• 화재진압, 인명구조, 심정지 등 긴급상황에서 공동현관문 출입 문제로 현장 도착 지연
– 공동주택 관리자 부재(교대, 휴대시간 등) 및 공동현관문 파괴 시 손실보상 문제 등으로 신속한 현장활동 애로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화재, 인명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공동현관문 출입 문제로 소방관의 도착 지연	〈 '소방관 공동현관문 프리패스' 시범운영 〉 • 아파트 등 공동현관문에 RFID 스티커 등록 • 긴급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출입 가능

추진과정

• RFID 스티커 구매 후 사전테스트 진행(2024.7.)
• 「소방관 공동현관문 프리패스」 시범운영 추진 계획 보고(2024.8.12.)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전공문 발송(2024.8.21.)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및 출입관리시스템에 RFID 스티커 등록(2024.8.22.~8.29.)
• RFID 스티커 배부 및 적극 사용 요청, GIS 지도상 RFID 등록 완료 확인(2024.8.30.)

개선효과

• 긴급 시 신속히 공동현관문 출입이 가능하여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 재산·생명 보호
• 별도 서버 등 시스템 구축 없이 RFID 스티커를 구매 및 공동주택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저비용·고효율 효과 실현 ※ RFID 스티커 단가(1,100원) + RFID 스티커 복사기(40,000원)
• 소방관의 현장 도착 시간 단축으로 대국민 소방 서비스 질적 향상






34

>>> 추진담당자 법무담당관 김원경 주무관

증여계약해제 안내 기능 생성으로 납세자 중심 패러다임 실현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증여계약해제 신고기간 내에 부과취소를 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는 민원 다수 발생
•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차단하도록 납세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증여계약해제 신고기간 내 부과취소를 하지 않아 취득세 추징 및 민원 다수 발생	〈 전국최초, 증여계약해제 안내 기능 생성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증여계약 해제 안내문 발급 기능 생성 → 선제적 안내 가능

추진과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증여 취득세 부과 취소, 미납분 추징 과세자료 추출 요청(2024.9.6.)
• 증여취득세 미납자 조사 및 증여계약 해제 안내문 발송 추진계획 수립(2024.9.12.)
• 구·군에 납세자보호관 9월 과제 통보 및 선제적 안내 추진(2024.9.~11.)
– 계약해제 신고 기간이 남아있는 미납자(12건, 5,500만 원)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하여 부과취소(환급) 처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증여계약해제 안내문 발급 기능 신설 요청(2024.10.2.)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증여계약해제 신고기간 안내문 발급기능 신설(2025.1.~) ▶ 전국 사용 중

개선효과

• 납세자 알 권리 강화 및 의도하지 않은 세금 납부 방지로 납세자 권익 향상 증진


[증여] 취득세 미납자에 대한 납부 등 안내

평소 구청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신고 후 미납자(발송일 기준)에 대하여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발생 됨을 알려드리고, 추식 중여 계약 해제를 희망하시면 중여계약 해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제방법 및 구비서류 등 ◆

■ 대상 : '24.6.1. 이후 증여 취득세 신고 후 미등기자 중 계약 해제를 원하는 자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직접방문 : (051) 000-0000
■ 구비서류 등
1. 증여계약 해제계약서
2. 증여계약 해제신고서
3. 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4. (취득세 수납한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문의처: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051-000-0000


BUSAN.com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납세자 권익 향상에 속도감 높여

언론보도(부산일보, '24.12.24.)

35

>>> 추진담당자 공공하수인프라과 최은락 주무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최단기간 적격성조사 완료 및 통과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1988년 아시안게임 올림픽요트경기장으로 선정된 수영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 최초 건설된 수영하수처리장은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처리효율 저하
- 환경부 정책방향, 시 재정여건 등 검토하여 2023년 7월 민간투자방식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격성조사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14~37개월)
  - 노후된 수영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 대규모 휴식·체육시설 조성(공사기간 2027~2034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민간투자방식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적격성조사에 14~37개월 소요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기간 단축 〉 •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의 시급성 인정받아 적격성조사 간소화 성공(8개월로 단축)

추진과정

- 사업추진방침 보고(2023.7.)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2024.3.)
-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 상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 등 추진(2024.4.~7.)
-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 상정(2024.7.11.)
- 안건 심의 통과(2024.7.25.) 및 심의결과 통보(2024.8.1.)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의회 동의(2025.7.)
-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5.12.)

개선효과

- 부산시 추진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인정받아 적격성조사 간소화 성공
- 적격성조사 기간이 8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사업기간 단축





36

>>> 추진담당자 관광정책과 이영민 주무관

선상 출장심사 실시를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평균 5,000여 명이 탑승하는 초대형크루즈선 입항 시, 크루즈터미널(영도구) 내에 C·I·Q(세관·출입국·검역) 기능이 없어 선내 대면 입국심사에 장시간 소요 및 탑승객 불만 증가
- 고부가 관광 산업인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타 국가 대비 미흡한 크루즈관광 인프라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크루즈선 입항 시 선내 대면 입국심사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부산 방문 기피	〈 크루즈 내 선상 출장심사 실시 〉 • 하선시간 단축으로 관광객 편의성 증대 및 크루즈선 유치 확대 기여

추진과정

- 초대형크루즈선 선내 대면 입국심사 실시 후 예정된 입항계획 취소사태 발생(2023.5.)
- 크루즈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선상 출장심사 재시행 건의(2023.6.) ▶ 부산시→법무부 건의
  - 크루즈선 입항 초기에는 선상 출장심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 1. 25.부터 입항 후 터미널 내 대면심사로 전환
- 선상 출장심사 시행 필요성 설명 및 요청(2023.6.) ▶ 부산시→국회
- 선상 출장심사 실시(2023.7.~)

개선효과

- 크루즈관광객 하선시간 단축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방문 크루즈선 유치 확대
  - (2023년) 105항차 → (2024년) 114항차 → (2025년) 237항차(2025.12.8.기준)
- 크루즈선사 대상 부산 이미지 제고 및 유치 마케팅 효과 확대
  - 상하이 국제 크루즈 써밋 지역협력파트너상 수상(2024.11.8.) ▶ 서비스 증진을 위한 부산시 지원에 대한 감사





37

>>> 추진담당자 노인복지과 이지원 주무관

주민 설득과 규제 완화로 장사대란 해결!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확충

- 범정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국무총리상)"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고령인구 및 사망자 증가 추세에 따라 추모공원 포화 대비 봉안시설 확충 시급
- 혐오·기피시설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 및 지역현안 해결 요구로 사업추진 애로
- 묘지공원 건폐율 제한 규정(2% 이하)으로 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추가 건립 불가

개선내용

개선 전

- 주민 반대 및 지역현안 해결 요구
- 묘지공원 건폐율 제한(2% 이하)

개선 후

〈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확충 전격 추진 〉

- 지속적인 설득으로 주민요구사항 합의
- 적극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건폐율 완화 (20% 이하)

추진과정

- 지속적인 주민 협상과 이해·설득 노력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 조정·합의
  - 주민 대표 간담회 개최(10회), 민·관 합동 TF팀 실무회의(수시),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부산시, 기장군, 시설공단)
- 적극적인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한 주민지원사업 확정·시행
  -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협조 및 사업 예산 검토, 확보 요청 등 추진
  - 언론 매체 홍보(KNN 기획보도, TV 시사프로 등)를 통한 사업 시급성 등 시민 여론 수렴
- 관계 법률 검토 및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불합리한 건폐율 규정 완화
  - 국토교통부 건폐율 관련 지침 개정 ▶ 묘지공원 건폐율 제한 규정 완화(2%→20%, 10배)

개선효과

- 주민지원사업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원 등
- 장사시설 확충사업 적기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장사수급 및 시민 장례 불편 해소
  - (추모공원) 2026년까지 5만기 확충, (영락공원) 2033년까지 3만기 정비
- 건폐율 규제 완화로 추모공원 내 제2봉안당 건립 추진 기틀 마련







38

>>> 추진담당자 투자유치과 김준영 주무관

경제자유구역 내 18년간 방치된 미개발부지 관련 기업애로 해소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2006년 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였으나,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주민 반대 등으로 2017년 매립폐기물처리장 공사 착공 후 중단
- 당초 예상 매립폐기물 발생량(5,447톤/년) 대비 기업입주 후 실제 발생량(약 200톤/년)이 감소하여 사업성 저하 → 해당 기업은 사업재개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
- 대상부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가 중첩되어 적용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 중첩구역으로 개발계획 변경 관련 법령 해석 차이

개선 후

〈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부지용도 변경 〉

- 인·허가 절차 간소한 경제자유구역법 적용,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미개발부지 활용

추진과정

- 경제자유구역 및 일반산업단지 중첩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이견 발생
- 행정소송 제기(2023.7.27.) 이후, 검토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을 위한 사례 발굴
  - 경제자유구역법 적용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경미한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제외
- 개발계획 변경 신청인과 조치계획 의견협의(2024.10.~11.)
- 매립폐기물처리장 폐지 관련 자원순환과와 의견협의(2024.11.15.)
- 개발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2024.11.2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2024.12.3.)

개선효과

-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소극적 행태규제 개선
- 개발계획 변경되어 유통센터 등 개발 가능,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39

>>> 추진담당자 문화유산과 김윤정 주무관, 김선정 사무관, 강석범 학예연구사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통한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성공 개최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개선배경

- 대표 문화유산 행사인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 야행(夜行)'은 행사기획부터 세부 프로그램까지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음
- 피란유산 9개소*의 특성상 여러 유관기관이 연계되어 있어 전문위탁기관 없이 전체 행사를 조율·운영하기 어려움

  * 부산항 제1부두,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부산기상관측소(중구), 임시수도기념관, 아미동 비석마을,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서구),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재한유엔기념공원, 우암동 소막마을(남구)

개선내용

개선 전

- 피란유산(9개소)가 분산되어 있어 행사 관련 유관기관 의견 조율 어려움

개선 후

〈 지역사회 상생 네트워크 구축 〉
- 구·군, 공공기관, 대학교, 상인회 등과 협업
-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협력 방안 마련

추진과정

- 지역공동체가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 형성
  - 피란유산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시대극,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22개의 다양한 시민참여 콘텐츠 제공
  - 지역상권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방안 마련
  - 부산항 제1부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2024.8.) 및 연구용역 추진(2024.9.~2025.5.)
  - 피란유산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2024.9.~11.)

개선효과

- 문화유산 활용산업의 새로운 협력모델 제시 및 행사 성공개최로 지역발전 활성화 기여
  - 2024년 22개 프로그램 운영, 총 91,348명 관람 ▶ 경제효과 44억 8,878만 원 추산
- 국가유산청 우수사업 선정 및 2025년 국비 2.56억 원 확보 성과







언론보도(부산일보, '24.12.24.)

40

>>> 추진담당자 보건위생과 최승혜 주무관

부산우수식품, 협업으로 완성한 지역 로컬브랜드 혁신

• 부산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개선배경

- 2018년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도입 후, 식품안전 및 관리·감독 중심 운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효과 미흡
- 대기업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지역식품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과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브랜딩 체계 구축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식품 안전 중심 일회성·전시성 사업 추진
- 부산우수식품 브랜드 인지도 저조
- 실질적 유통판로 개척 한계

개선 후

〈 부산우수식품 브랜딩 솔루션TF 운영 〉
-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업 추진
- 대형유통시장 판로 확장 및 홈쇼핑 진출 성과

추진과정

- 생산실적 및 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부산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2024.3.)
- 인증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2024.4./2024.10.)
- 부산우수식품 브랜딩 솔루션TF 구성 및 킥오프회의 개최(2024.6.)
- 협업과제 실행으로 뉴미디어 SNS 기획(7편, 평균 4만 뷰 조회) 및 다각적 홍보 추진, 백화점 팝업존 및 지역 홈쇼핑 입점을 통한 유통 판로 확대(2024.9.~)

개선효과

- 백화점 특판전, 지역 홈쇼핑 입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
- 지속 가능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지역 대표 브랜드 가치 강화





41

>>> 추진담당자 보건위생과 박정현 주무관

365일 시민 곁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 통합·확대 운영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개선배경

- 심야·휴일에 약국 이용 어려움으로 시민 불편 및 응급실 과밀화 문제 지속
-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한계(품목 제한, 복약지도 불가 등)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곤란
- 정부형·부산형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준 차이로 행정 처리 혼선 가중

개선내용

개선 전

- 심야·휴일 시간대 약국 이용 어려움
- 응급실 과밀화 및 상비의약품 오남용
- 정부·부산형 심야약국 운영기준 차이

개선 후

〈 공공심야약국 통합·확대 운영 〉
-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및 응급실 과밀화 완화
- 전문약사 복약지도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 심야약국 운영기준 통합으로 행정 효율화

추진과정

-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부산형 공공심야약국 4개소 운영(2021.2.)
- 정부형 공공심야약국 도입(2022.7.) 및 시범사업 확대(2023.9.) ▶ 11개소
- 약사법 개정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전환 관련 구·군 수요조사 등 추진(2024.9.)
- 부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 제정 및 총괄 운영계획 수립(2024.12.)
- 공공심야약국 16개소 지정 완료(2025.2.) ※ 요일제 2개소 포함
-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2025.4.) 및 운영평가, 개선사항 발굴 등 추진(2025.7.)

개선효과

- 응급의료 과밀화 완화 및 의료취약지역 지원으로 지역 형평성 제고
-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및 전문약사의 복약지도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심야약국 운영기준 통합으로 혼선 해소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시 재정 부담 완화



부산시보 게재 ('25.3.4.)



42

>>> 추진담당자 보건위생과 전은정 주무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응급분만 안전망 구축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개선배경

- 가임기 여성 및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35세 이상 산모 및 난임시술 등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출생아수 증가 추세
-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치료 인프라는 고비용·저수익 시설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므로 선제적 지원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응급·고위험 분만대응 여력 감소로 응급실 미수용 등 진료협력체계 미흡

개선 후

〈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확충 〉
- 중증도 단계별 응급분만 의료체계 추진
- 24시간 응급분만 대응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집중치료 가능

추진과정

- 지역 분만 의료기관 포함 27개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핫라인 구축(2025.1.)
-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직 확대(2025.3.)
-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확충, 집중치료실 병상 증설, 노후장비 교체(2025.4.)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재정지원 확보 기반 마련, 현장 중심 사업확장(2025.6.)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지원 선정

개선효과

- 권역 내 진료협력 강화로 '부산 안에서 해결하는 응급분만·치료체계' 완성
- 치료 접근성 향상으로 작은 생명까지 지켜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실현





43

>>> 추진담당자 노인복지과 김성국 주무관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시행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개선배경

-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의향을 미리 파악할 수 없고, 공영장례를 치르기 전 제3자가 직접 지방정부에 장례주관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초고령사회 진입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하여 일부 기초지방정부에서만 추진하던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성 증대

개선내용

개선 전

- 무연고자 사망 후 장례주관자 지정
  - 무연고자 사망 후 공영장례 치르기 전 제3자가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

개선 후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 시행 〉

- 무연고자가 장례주관자를 사전에 지정 가능
  - 장례 희망방법 사전 파악 ▶ 16개 구·군 확대
- 웰다잉 및 사전장례주관 사업 상담, 교육 등
  - 부산시·비영리민간단체·교육기관 협력

추진과정

- 유관기관 회의 및 의견 조회(2024.10.~11.)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안내 및 공영장례 매뉴얼 개정의견 조회(2024.12.)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추진 및 공영장례 매뉴얼 개정 알림(2025.1.)
- 광역지방정부 최초,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부산시 전체 확대 추진(2025.2.17.~)
- 구·군, 공단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추진(2025.3.)

개선효과

- 무연고자의 생애 자기결정권 보장 및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후 복지체계 강화
- 공영장례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한 지원율 증가 ※ 2023년 67% → 2025년 6월 기준 92% 지원







언론보도(KBS뉴스, '25.2.15.)

44

>>> 추진담당자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이성현 주무관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를 활용한 장림유수지 유지용수 공급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는 활용방안 부재로 강변하수처리시설로 이송 및 처리비용 부담
-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사하구 소재 장림유수지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활용
- 인근 지역의 수자원 부족으로 우천 시 하수관로에서 유출되는 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유수지 악취 발생 및 수질 개선 미비로 주민 만족도 저하

개선내용

개선 전

-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 활용방안 부재
- 장림유수지 수자원 부족 및 수질개선 미비

개선 후

〈 지하유출수를 장림유수지 유지용수로 공급 〉

- 버려지는 지하유출수 활용하여 장림유수지 수질환경 개선 및 하수처리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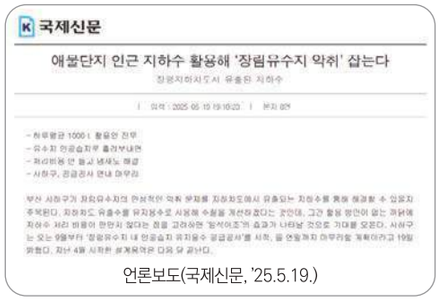
추진과정

- 연간 방출되는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량 확인 및 수질검사 실시 → 생활용수기준 적합
- 장평지하차도 지하유출수를 장림유수지 유지용수로 공급 협의 ▶ 부산시 ↔ 사하구
- 지하유출수 공급방식 검토 및 사업 예산 확보 추진(2025.2.~)
  - 장평지하차도 건립 시 설치한 집수정 및 침사조, 배출펌프를 활용하여 유수지로 통과하는 하수박스 내부에 관로 설치
  - 대규모 굴착공사 불필요함에 따라 최소사업비만 산정 가능(예산절감)

개선효과

- 버려지는 지하유출수를 활용하여 하수처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절감
- 생활용수 수준의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장림유수지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 힐링공간 조성




국제신문

애물단지 인근 지하수 활용해 '장림유수지 악취' 잡는다

장평지하지도시 유출된 지하수

언론보도(국제신문, '25.5.19.)

45

>>> 추진담당자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최우석 소방경

'인명피난구조공간'피난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운영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201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난시설 설치 의무는 있으나 세부기준 부재
  - 피난시설(대피공간, 노대등, 경사로, 연결복도·통로) 세부설치 기준 부재, 형식적 설치에 따른 실효성 미흡
- 피난시설 중 경사로, 연결복도 및 통로 설치 실제 사례 부족
- 피난약자시설 특성상 노인 등 피난 약자는 조력자의 도움 없이 피난불가

개선내용

개선 전

- 피난약자시설의 피난시설 세부 설치 기준 부재
- 형식적인 공간 설치로 실효성 미흡

개선 후

〈 피난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시범운영 〉
-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부산시 전체 시범운영 추진 중

추진과정

-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자료 수집(2024.7.)
-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2024.8.)
-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2025.2.)
- 건축정책과와 협업하여 건축행정개선협의회 안건 상정(2025.3.) ▶ 수용(법제화 추진)
- 전국 최초,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적용가이드」 제정(2025.4.3.)
- 구·군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개선사항 시범운영 시행(2025.4.4.~)

개선효과

- 법제화 전 시범운영으로 실효성 검증 및 신속한 선진 행정 수행
- 인명피난구조공간 신설로 시민안전 및 재난 대응력 강화
- '전국 최초' 시범운영 시행으로 중앙부처 및 타 지방정부 선도적 역할 수행



건축행정개선협의회



피난시설적용가이드



가변형 '인명피난구조공간' 신설

46

>>> 추진담당자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김경훈 소방위

전국 최초! 위험물 정보지도 웹사이트 자체 개발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보가 각종 시스템, 자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 어려움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장소(화학공장, 주유소 등)

- 출동 현장에서 지휘관이나 소방대원이 위험물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부족
  -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고, 물질마다 진압 대책이 다르므로 초기에 정보 제공 중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위험물 정보가 분산되어 통합관리 어려움
-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부족

개선 후

〈 전국 최초, 위험물 정보지도 자체 개발 〉
- 웹 기반 위험물 통합지도 개발하여 PC·모바일 어디서나 위험물 정보 실시간 조회 가능

추진과정

- 웹 기반 위험물 지도 개발을 위한 사례수집 및 테스트 등 추진(2024.11.~)
- 소방서별 위험물 관리 대장 일원화, 위험물 데이터 취합 및 분석(2024.12.~2025.4.)
- 기능 단위별 개발 착수 및 지도 표출 연동 완료(2025.3.~4.)
- 모바일, PC 환경 반응형 UI 구현 완료 및 내부 사용자 시범 운영(2025.4.)
-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정식 배포 및 언론 홍보(2025.5.~)

개선효과

- 위험물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제공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 가능
- 현장 지휘관의 초기 대응 판단 및 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





47

>>> 추진담당자 중대재해예방과 김태우·이창훈 주무관

붕괴위험 공동주택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현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E등급 건축물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나, 거주민의 자발적인 이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주대책 미비 ※ 중구 2개소, 영도구 2개소
- E등급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안전 우려 및 이주대책 추진 방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개선내용

개선 전

-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 자발적 이주 독려 외 실질적 이주대책 미비

개선 후

〈붕괴위험 공동주택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

- 관계기관 협업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마련

추진과정

- E등급 공동주택 현장점검 실시(2025.1.)
- 관계기관과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회의 및 보고회 등 추진(2025.2.~4.)
-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2025.4.15.)
  * 부산시, 중구, 영도구,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 서구 소재 D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회의(2025.4.29.) ▶ D등급 거주자 확대 지원
- 붕괴위험 공동주택(E, D등급) 거주민 이주대책(임대주택 지원 등) 추진(2025.7.~)

개선효과

-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D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
-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언론보도(부산MBC, '25.4.16.)

48

>>> 추진담당자 기술심사과 전혜란 주무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평가 시, 지역업체 가점 적용 신설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개선배경

- 신기술·특허 등 지역 내 우수한 건설기술이 초기 활용실적 미비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활용 저조
- 부산시는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한 신기술·특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미비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등과 상충하는 문제 발생

〈행안부 및 부산시 규정 비교〉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12절(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7(지역건설산업자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은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 단순 지역업체 가점적용 불가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선내용

개선 전

- 지역업체 우수기술 활용 관련 규정 상충
  - (행안부) 지역업체 가점적용 불가
  - (부산시) 지역업체 보유 신기술·특허 사용 권장

개선 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 가점 신설〉

- 행안부 예규 개정 및 부산시 운영기준 개정
- 전국 최초, 지역업체 가점 적용 규정 신설

추진과정

- 신기술·특허공법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수립(2025.3.28.)
-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 등 개선 건의 추진(2025.4.8.~) ▶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과 협업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달성(2025.5.1.)
  - 지역 중소업체의 신기술 개발 유도 등을 위해 공법선정 평가항목 중 '접근성 : 지역업체(최대3점)' 신설
- 부산시 세부 운영기준 개정계획 수립(2025.5.1.)
- 「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개정 및 배포·시행(2025.5.22.)
  - 지역업체 제안기술 가점 적용규정 신설 ▶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

개선효과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전국 최초, 지방정부 세부기준 수립
-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업체 보유기술을 보호·육성하고, 기술개발 참여유도로 지역업체 역량강화 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9

>>> 추진담당자 도로계획과 김정명 주무관

적극행정을 통한 대심도 터널 지반 침하 및 사업지연 요인 사전해소!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개선배경

- 대심도 승학터널 시점부의 사상하단선 하부 통과 구간에서 지반침하 및 종점부 지장공동구(한전, kt) 이설 지연으로 준공 지연 등 예상
- 대형 도로터널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간접비 증가 등 문제 사전해소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대심도 도로터널 공사 구간 지반침하 및 지장물 이설로 인한 사업지연 요인 발생

개선 후

〈 적극행정으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해소 〉

- 관련 기관(부서),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추진과정

- 도시철도(사상하단선) 굴착공사와 도로터널 공사 동시 시공으로 "지반침하 요인 해소"
  - 부산시 철도시설과 및 부산교통공사와 동시 시공방안 협의 추진(2024.4.~8.)
  - 부산교통공사의 동시시공 관련 제반사항 처리요청(2024.11.)
  - 위수탁 협약 검토 승인(2024.12.) 및 민간사업자에 협약체결 통보(2025.1.)
- 지장물 이설 없이 도로종단계획 조정으로 "사업지연 요인 해소"
  - 도로종단경사 관련 전문가 자문, 주행시뮬레이션 실시(한국도로공사) 등 주행 안전성 평가용역 실시 (2023.12.~2024.2.)
  - 한국전력공사 및 KT와 지장물(공동구) 이설방안 협의 추진(2024.5.~6.)
  - 지장물 이설 대신 도로종단경사 조정 방안 협의 및 사업비 분담 결정(2024.7.~10.)
  - 민간사업자에 업무협약 체결 통보(2025.7.)

개선효과

- 도시철도(사상하단선) 운행 중 지반침하 등 굴착에 따른 안전저해 요인 등 사전 해소
-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한 사업(개통) 지연, 시민불편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 배상금 문제 사전 해소

50

>>> 추진담당자 기업지원과 변용재 주무관, 최소영 사무관, 이현재 주무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체계 구축

• 부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개선배경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정주 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요구 증가
-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주거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 필요

개선 후

〈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

- 관련기관과 협약 체결로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주택(476호)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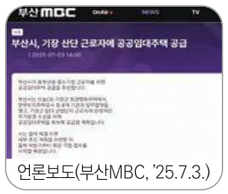
추진과정

- 원스톱 기업현장 방문(2025.2.17.) ▶ 근로자 숙소지원을 위한 장안산업단지 주변 공공주거 지원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실무회의 및 현장방문(20회) 실시(2025.3.~7.)
- 기장군 소재 산업단지별 입주기업 협의회 등 간담회 추진(2025.4.29.)
- 근로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2025.4.~5.)
- 업무협약서(안) 작성 및 협약기관 협의(2025.5.), 업무협약 체결 계획수립(2025.6.)
- 동부산권(기장)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협약 체결(2025.7.3.)
  - 8개 기관 ▶ 부산시, LH(부울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산업단지별 입주기업협의회 등

개선효과

- 기장군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협력체계 마련
-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언론보도(부산MBC, '25.7.3.)



언론보도(부산일보, '2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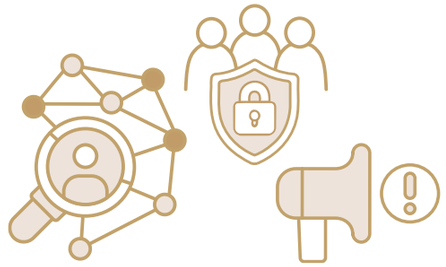
Chapter 04 부 록

Chapter
04

부 록

1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 바랍니다.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 바랍니다.



규제신고처

온라인(인터넷)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규제신문고 → 규제건의
www.sinmungo.go.kr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 규제 개선 건의(제안)하기
https://www.busan.go.kr/minwon/gujereportcenter

방문·전화

구분	부서	전화 (지역번호 051)
부산광역시(본청)	조직담당관	☏888-1171~1176
중 구	기획감사실	☏600-4032
서 구	기획감사실	☏240-4035
동 구	기획감사실	☏440-4031
영 도 구	기획감사실	☏419-4082
부산진구	기획예산과	☏605-4035
동 래 구	기획감사실	☏550-4041
남 구	기획예산담당관	☏607-4036
북 구	기획감사실	☏309-4034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749-6225
사 하 구	기획실	☏220-4015
금 정 구	기획감사실	☏519-4032
강 서 구	기획실	☏970-4032
연 제 구	기획감사실	☏665-4031
수 영 구	기획감사실	☏610-4034
사 상 구	기획감사실	☏310-4032
기 장 군	기획감사실	☏709-4032

>>>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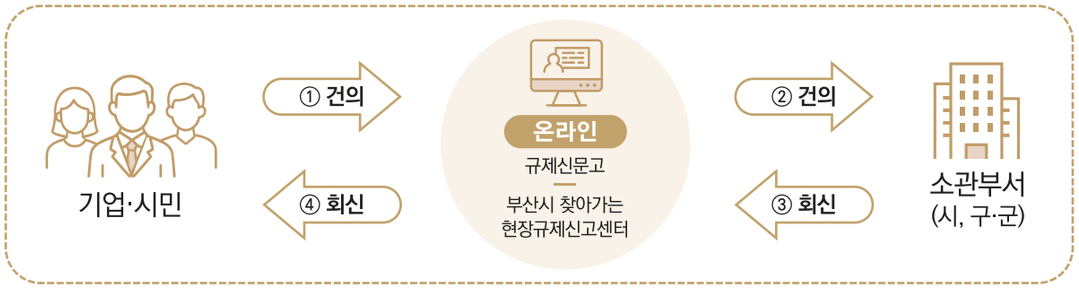
규제신고 처리절차

중앙규제 (중앙부처의 법령·인허가 행태 규제)





지방규제 (지방정부의 조례·규칙·인허가 행태 규제)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

| 개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확실한 보상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확산

| 절차 |

접수	실적검증	실무심사	온라인심사	적극委심사	인센티브부여
부서 및 시민 추천	사실확인, 제외대상 등	선발예정인원 2배수선정	온라인 설문조사	최종 선발	인사과

| 특전 |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우대* 하나 이상 부여하되, 개인희망 필수 고려
선발자 전원 시장상장 + 부상금 + 정책연수가점 2점 부여

* 특별승급,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가점부여,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특별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 개요 | 공무원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절차 |

신청	검토	심의·의결	결과통보 (30일 이내)	이행관리 (관련부서)
공무원(건의부서) →조직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위원회	조직담당관 →건의부서	의견에 따라 적정 조치 후 결과 회신

| 면책 | 상급기관 감사 면책건의 + 자체 감사 면책

적극행정 보호지침 훈령

| 개요 |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보호

| 지원 | 징계의결,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 고소·고발,민사소송의 경우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지원

| 절차 |

신청	지원신청 접수·안내	지원여부 심의·의결	지원 집행	수사·소송 진행 상황 보고 등 의무	지원취소 * 반환여부결정
(공무원)	(책임관)	(위원회)	(책임관)	(공무원)	(위원회)
	▼ ▲ 사실관계 확인 (감사부서의 장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결정 취소 가능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조직담당관
TEL : 051) 888-1176